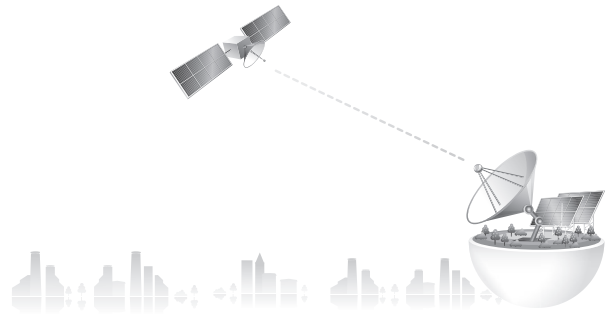


양계안테나



김동진 편집국장



파란유통 집중단속 농가피해 속출 식약처 파란대책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불량식품 단속이라는 미명하에 전국의 양계장들을 무차별적으로 방문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명확한 법적기준 없이 마치 양계인들을 범법자인양 농장을 벌집쑺시 듯 만들어 놓고 있어 계란을 생산하는 양계인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연초 불량계란 사건이 터진 후 잠잠하던 것이 전남지역의 한 양계장에서 오염된 계란이 빵과 과자를 만드는 업체에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이 언론에 크게 부각되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다시 등장하였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에서는 불량식품 단속을 내세워 파란유통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이다.

사실 파란유통 기준에 대해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원칙없는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파란까지 문제를 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처사이다.

지난해 이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식약처는 시행규칙 제 51조 제2항과 관련 ‘난각이 손상되어 내용물이 누출되거나 난각막이 손상된 알’과 관련하여 ‘난각은 깨졌으나 난각막이 손상되지 않은 계란’에 대해서는 유통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정식 공문을 통해 전달해 오면서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계란이 유통되어 왔다.

계란 생산자들은 과거에 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계란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유통이 가능하지 않은 계란(부패된 알, 산패취가 있는 알, 곰팡이가 생긴 알, 이물질이 혼합된 알, 난각이 손상되어 내용물이 누출되거나 난각이 손상된 알, 부화에 이용된 알 및 정상적인 계란의 형태가 아닌 알)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유통망을 통해 판매를 하고 있다. 식약처 잦대로 인해 파란이 유통되지 못할 경우 1년에 생산액 대비 약 2천억원에 해당하는 농가피해가 올 것으로 전문

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분회는 식약처가 명확한 기준없이 무차별적인 단속을 통해 농가에 책임을 전가할 경우 이는 정부의 정책부재에 있음을 천명하고 '계란유통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 '파란폐기에 따른 농가손실 보존대책수립', '파란대책마련 수립시까지 현재 진행중인 집중단속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식약처와 조율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계란생산자들은 분회를 중심으로 뭉쳐 농가 생존을 위한 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식약처가 적극 나서 명확한 법적해석과 무차별적인 단속을 중지하여 계란유통이 정상화되길 기대한다.



3개월 만에 고병원성시 재발 오리에 대한 사육제한 등 강력 대처 필요

전남 강진과 나주에서 고병원성시가 3개월여만에 재발하고, 재래시장에까지 바이러스가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은 물론 가금사육농가들이 초 긴장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대부분 발생되어 확산된 최초의 근원이 오리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에 양계농가들은 여간 신경이 쓰이는게 아니다.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지역에는 오리사육을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는 실정이다. 매번 시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생사실이 도배된다. 이후에는 각 시군과 관련협회 등에는 판에 박혀있는 듯한 공문이 줄지어 도착한다. 시재발방지 대책 회의 소집부터 농가 시 차단방역 조치에 이르기까지 제목조차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공문이 도착하는데 상당부분이 중복된 내용들이 태반이다. 전화예찰, SNS 발송도 이제는 일상적인 귀찮은 일들로 치부되기 일쑤이다.

그나마 최근에 눈에 띄는 것은 가금농장 지역확산 위험도 분석 결과와 시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이다. 위험도 분석은 고위험군 순위를 지역적으로 5등급에서 2등급까지 분석하여 알려주는 것이며, 정보공개는 시발생농장 상세정보와 가족전염병 발생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정보의 자유와 신속한 현황파악을 위해 중요한 내용이지만 공개대상을 제한적으로 두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방역기관, 축산단체, 해당지자체, 축산전문지 등 실제로 관련된 곳에만 정보를 제한하여 제공하되 일반 언론사나 국민들에게 까지 상세히 알려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이외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 무차별적인 언론보도도 줄어들고 국민들의 불안심리도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시 특별방역기간이 무색할 정도로 이제는 상시 발생하고 있는 시지만 실적위주,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양계산업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안모색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라 여겨진다. **양계**